

# AI도입, 제조업 비용 46% 절감 전망 매출증가·고숙련직종 인력수요 확대

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발간  
AI 활용 제조업 등 일자리 전환 분석  
車 부품 전환지도 등 연구결과 수록

AI(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이슈분석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김수현 박사는 전문가 인터뷰 등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7월~9월까지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 비율은 2.7%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에서 31.6% (2023년 정보통신부 조사 기준)로 기관

별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 이용자 비중은 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종사자들은 도입률과 이용자 비중을 각각 35%, 44%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종사자들은 전문가 전망보다 낮은 26%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경차도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확장·고도화 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판단한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활용도 낮음'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았다.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기업 규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역량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고숙련 직종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이수 분석은 전망했다.

김 박사는 "중소제조업체의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과 고용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며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지원, 교육훈련 강화,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는 이밖에도 '음식점 키오스크는 아르바이트 생을 대체할까? (박세정 박사)',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일자리 전환 실태분석(전주용 부연구원)' 등 첨단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지역사례와 고용동향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일자리 전망 현황, 2024년 상반기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전환지도' 등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원스톱 지원 강화

KIAT·중견련·KOTRA·무보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견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 기관 4곳이 힘을 모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9일 오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글로벌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 서비스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성공하려면 시장 분석부터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개발, 후속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병주 KIAT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성 KOTRA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민병주 KIAT 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

연구개발, 수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보유한 기관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존재들"이라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T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21년 독일에 소재부품 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KDN, 광주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추진

'첨단 에너지ICT솔루션 적용' 협약

한전KDN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 등과 '광주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특화 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소재 에너지기업 등이 참여한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

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조성 ▲ 분산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현 ▲ 분산

에너지 실증 및 신기술개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육성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한전KDN은 광주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분산특구 모델의 핵심기술인 공공클라우드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MG-EMS), 가상발전소(VPP), 마이크로인버터 등 첨단 에너지ICT솔루션 지원으로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구현에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불피해 농촌에 '맞춤형 봉사' 시작

농식품부, 경북 안동 등 피해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일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경남 산청 등지에서 시작된다.

활동에는 총 6만 20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전국 1100여 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전기 수리, 건강검진 및 상담,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한국마이스터협회가 안동에서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및 전기 수리를 시작한다. 4~5월에는 굿뉴스월드,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과 산청군을 찾아 기초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심리 안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 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길안면의 한 농가.

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청송군의 산불 피해 가구를 위한 주택 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온라인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농관원, 14일부터 25일까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25일 실시되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가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비자 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도 합류한다.

농관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다.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 놓으나 상세 페이지에는 외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라고 언급했거나 실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커피숍 '일회용컵 회수·보상' 청주서 첫발

환경부, 내달부터 스타벅스서 시행

환경부가 10일 청주시 및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지자체 등과 협약을 맺어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 '청주분평 DT점'에서 열렸다.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업종인 커피 전문점과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매년 증가해 연간 21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의 참여 기관들은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5월 중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 매장 28곳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고객이 청주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자체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에코별 12개를 모을 경우 원하는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